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06.22)

□ 위기대응과 미래준비를 위한 산업정책 (지식경제부)**1.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전망**

- **동향:** 최근 경제의 급락세가 완화되며, 일부 실물지표의 경우 회복 조짐도 나타남. 하지만 우리 경제의 경기 저점 통과 및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.
- **전망 및 과제:** 금번 경제위기는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,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 따라서 성장 잠재력의 확보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, 근본적인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.

2. 경제위기로 인한 산업환경의 변화 전망

- **경제환경의 변화**
 - 단기: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며,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 확대될 것임.
 - 중장기: 거대 시장 잠재력과 경제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가 미국과 함께 세계 정치 및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임.
- **글로벌 산업구조 개편:** 과잉생산 및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
- **글로벌 경쟁구도 변화:** 중국의 부상, 일본의 재무장, 구미의 사업구조전환
- **한·중·일 경쟁분업 구조 변화:** 중국의 급부상, 일본의 재정비, 한국의 선전으로 3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.
- **기술환경:** 녹색 등 위기극복을 위한 신기술 개발 경쟁 가속화
 - 녹색기술 투자 확대: 기후변화 대응,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선진국 정부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음. 기후변화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, 물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.

- 신기술 조기확산: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BT, IT 등 신기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함.
- 비즈니스 모델 변화: 비용절감,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GPN(Global Production Network)형 비즈니스의 확대.

3. 한국산업의 대응 방향

○ 한국산업의 발전비전

●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: 상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● 성장 잠재력의 확충 : 혁신의 창출·확산 촉진과 창조적 인력양성 및 공급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●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: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, 글로벌 통상전략 재정립 ● 경제의 구조적 병목 해소 :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,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	⇒	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산업강자, 동북아 분업·경쟁의 선도자 ● 중장기 성장잠재력 축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● 대·중소기업/제조·서비스업/수출·내수산업의 상호보완적 동반 발전 ● 구조적 취약점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위기에 강한 경제체질 달성
--	---	--

○ 경제위기 이후 한국산업의 발전전략

① 상시 위기 대응체제 구축

- 불안정한 경제상황의 재현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위기대응 모니터링 체제 구축
- 위협요인 외에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 발굴 추진

②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

- 구조개편기를 활용한 한국산업 입지 강화 및 재편 이후 경쟁상황 대비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

③ 혁신의 창출·확산 촉진

- 국가 R&D 시스템 전면 개편
- 정부 R&D 시스템 효율성 제고

④ 창조적 인력 양성 및 공급

- 산업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력 양성 및 국내외 우수인력 공급 활성화

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

- 시스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대기업의 동반자로서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시급
- 보호와 지원 위주에서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혁신

⑥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

-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, 한·중·일 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⇒ 주력산업의 선도경쟁력의 확보, 부품·소재산업 고도화, 신성장동력 및 녹색산업 육성

⑦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
-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경제시스템 개선

⑧ 글로벌 통상전략 재정립

- 글로벌 교역량 감소, 한·중·일 분업구조의 재편 등에 따른 글로벌 통상전략 재정립

⑨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

- 위기이후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후변화·에너지위기 대응역량에 좌우 ⇒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, 온실가스 감축 및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

□ 경기활성화를 위한 인프라투자 및 지역개발정책(국토해양부)

1. 경기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

○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

- 인프라 투자의 취업 및 생산유발효과가 감소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임.
- 인프라 투자의 정체로 양적·질적 측면에서 부족: 인프라 축적도 투자역사가 짧아 현재 우리나라 인프라 스톡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.

○ 2009년 인프라 투자 현황 및 성과

- 기본방향: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규모를 대폭확대,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, 지방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적극 지원,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, 안전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 조성.
- 투자성과: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년 인프라 투자 예산의 65%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.

2.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정책

○ 기본방향

- 광역경제권, 초광역개발권, 기초생활권의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으로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함.
-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추구함.
- 지방분권 및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함.
- 중단기적 지역경제 활성화: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, 새만금 등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과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확대 및 지방이전 기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.

○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추진현황

① 광역경제권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

- 추진방향: 인구 500만 이상의 5대 광역경제권(수도권, 충청권, 호남권, 대경권, 동남권)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(강원권, 제주권).
-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, 인구규모, 역사 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+2로 설정하여 지역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함.
- 활성화 방안: 광역경제권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, 인력, 인프라 등 핵심 선도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.
-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기반 구축,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확립(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, 2009.04)

② 초광역개발권 추진방향 및 현황

- 기본구상(안): 남해안 선벨트, 서해안 차세대주력산업벨트, 동해안 에너지·관광벨트, 남북교류·접경지역 벨트. (내륙벨트 추가 방안 검토 중)
- 추진현황: 국토부 해안권기획단(2008.11, 설치운영)과 관련 지자체간 수시협의체제를 구축하여 기본구상(안)을 마련함.
- 해안권별 '발전종합계획'수립 추진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.

○ 핵심 지역개발시책 추진현황

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

- 추진배경: 홍수 및 물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이 필요함.
- 핵심 추진과제: 홍수조절용량을 약 43% 증대, 용수공급량을 약 13% 증대,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, 수변공간에 복합공간(자전거길, 체육공원, 수상레저 시설 등)의 설치.
- 기대효과: 연간홍수피해액 절감과 가뭄 등 물부족에 대비가 가능함. 수질 개선 및 연간 10만톤의 CO₂ 저감을 기대함.
- 추진현황 및 계획: 연구용역, 전문가 자문, 정부위원회, 관계부처협의,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6월초 확정(06.08) ⇒ 4대강 본류

준설, 보 설치, 하천 정비 등 11년 완료 예정임.

② 새만금 프로젝트

- 추진방향: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, 일본 등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 중심지로 급부상함에 따라, 새만금 지역을 복합용지로 전환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함(2008.10.21 국무회의)
- 개별 사업간 연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을 위해 기본구상을 구체화함. ⇒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음.
- 경지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조제 공사를 조기 추진중에 있음.
- 새만금 주변지역에 공항, 항만,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임.
- 사업조기 착수를 위해 용도가 지정된 토지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함.

○ 향후 추진계획

- 지역재정 지원제도 개편방향을 확정
- 지역 발전 5개년 계획수립
-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확정
- 광역경제권 구축, 저탄소 녹색성장, 새만금 등 새 정부의 국토전략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함.
- 2050년까지 주요 메가트렌드(경제통합, 초고령화, 다문화사회, 통일, 기후변화, 자원위기)를 분석하고, 이에 따른 新국토발전축,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함.

□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외통상정책 (FTA 정책을 중심으로)(외교통상부)

1. 국제금융위기와 대외통상환경

- 경제위기속에서도 각국 정부의 FTA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으

며 전 세계적인 FTA 체결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.

- 미국, 일본,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, BRICs등 신흥 거대경제권의 빠른 회복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망됨.

2. 자유무역과 우리의 대외경쟁력

-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방형 통상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DDA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.

3. FTA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

- 추진성과: 1998년 최초로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이후 싱가포르, EFTA, ASEAN 등 현재 4건 15개국과의 FTA 발효함.
- 미국, 인도, EU와의 FTA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중이며, 현재 GCC, 페루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멕시코 등 총 6건의 FTA가 협상 진행중임.

4. FTA 확대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

-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국, EU, 인도와의 FTA 조기 발효 노력중임.
- GCC, 페루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멕시코 등 지역별 수출 확대 거점국가이자 자원부국들과의 FTA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.
- 신규 FTA 협상추진
 - 유망 수출시장인 터키 및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 연내 개시
 - 중국, 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 노력
 - BRICs의 일원인 브라질을 포함하고 있는 MERCOSUR 및 러시아와의 FTA 추진 여건을 조성, 남아프리카관세동맹, 이스라엘 등 여타유망국가와의 FTA 추진을 검토함.